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251
----------	------

발의연월일 : 2025. 3. 21.

발 의 자 : 장동혁 · 박준태 · 곽규택
조배숙 · 주진우 · 김상훈
김도읍 · 인요한 · 주호영
백종헌 · 박덕흠 · 이인선
조지연 · 정희용 의원
(14인)

제안이유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인 2025년 1월 262만여 명이고, 외국국적동포는 89만여 명으로 외국인 3명 중 1명은 동포일 정도로 외국국적동포의 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1999년 12월 10만여 명에서 현재 9배 급증하였음.

또한, 2019년 7월 재외동포의 인정 범위가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동포로 확대되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동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수 청년 동포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의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내 체류 외

국국적동포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권리를 고양하고 모국에 보다 큰 자긍심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조기적응, 사회통합, 체류·영주·국적 취득 지원 등”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업무 범위, 지정 요건 및 지정 취소요건을 정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신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률서 준수 교육, 사회통합·조기적응 및 체류자격·영주·국적 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생활 법률서 준수 교육·정보제공·상담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 사업
2.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영주·국적 취득 등 법적 지위 향상 지원
3.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 사업·통역 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법무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6조의2(동포체류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 국적동포의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 사회통합·조기적응 및 체류자격·영주·국적 취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동포체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p> <p><u>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p> <p><u>1. 「출입국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초생활 법질서 준수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 사업</u></p> <p><u>2.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영주·국적 취득 등 법적 지위 향상 지원</u></p> <p><u>3.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 사업·통역 지원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u></p>

③ 법무부장관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시정명령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운영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